광주 공공시설물 절반 이상 '지진 무방비'

649곳 중 60% 내진 설계 안돼

2011년부터 보강 한푼도 안써

문상필 시의원 지적

광주지역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필요한 시설물 중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문상필(새정치・북구 3) 광주시의원이 광주 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 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649곳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41.4%인 26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80곳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도로시설물은 289곳 중 157곳만이 설 계가 반영됐으며, 건축물은 217곳 중 불과 66곳만

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또한,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사정이 더 나빠 68곳 중 4곳을 제외한 64곳이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로 확

수도시설은 31곳 중 5곳만이, 공동구와 폐기물처 리시설은 각각 4곳과 3곳 모두 내진설계가 안된 것 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시철도는 37곳 모두가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는 2009년부터 도로, 철 도, 공항, 항만, 원자로 등 공공시설·건축물과 민간 병원·학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은 관리 주체인 공공 기관이 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내진 보강을 하고 결과를 방재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진 보강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매년 20억~170억원의 예 산을 투입해 내진보강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사업 에는 투입하지 않아 실적이 전무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는 지난해 6월 동구 동남쪽

3km 지점에서 진도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 2011년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시는 내진 보강을 한다며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실제 사업에는 한 푼도 투 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가 내진설계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내진보강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 조기에 내진 보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략적 사과?

김무성 "개헌 발언 불찰" 체면 불고 하룻만에 철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논의 의 불가피성을 지적한 자신의 발언을 하루 만에 거 둬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예정에 없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주재로 열 리는 회의라 애초 김 대표 참석은 예정에 없던 일이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하이 개헌 발언과 관련, "불찰이었다"며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 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색하고 자신의 말을 거둬들였다.

그는 또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다만 정기국 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이라고 걱 정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만에 개헌의 불가피 성을 지적한 모습이 되면서 정치 현안을 놓고 박 대 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갈등을 빚는 형국이 된 게 김 대표에게 부담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이후로 개헌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본 인의 지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개헌논의에 폭발적으로 불이 붙은 상황 이 된 것도 '조기 수습'의 또 다른 이유였다.

실제 김 대표가 개헌 필요성에 원칙적 찬성 입장 을 밝혀 왔고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 제'를 거론할 정도로 발언이 구체적이었던 것을 감 안하면, 개헌과 관련한 본인 구상은 어느 정도 정리 돼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발언의 파장이 예상을 넘어 커지자 당장은 본인 입장이 다소 난처해 지더라도, 논의가 더 커지기 전에 사 태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亞문화전당서 '문화의 달' 행사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빛을 노래하라'를 주제로 '2014 문화의 달' 행사 개막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의달 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 는 17~19일 아시아문화광장 일원과 양림동, 대인예술시장, 동명동 등에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지원 특별법 만든다

전남도, 정부·지자체 출연금으로 재원 마련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여수, 울산·미포, 온 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유화 학국가사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잠정)에 따르면 산단 주변 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산단 입주업체와 중 앙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연금을 관리하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산단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들의 효율적인 지 원을 위해 산단 지역별 지원협의체를 설치해야 한 다. 환경영향 조사도 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석유화학산업이 국가 산단을 중심으 로 큰 성장을 이뤘으나 주변지역은 화학사고,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단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사업을 하려면 특 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산단의 지방세는 국세와 비교하면 턱없 이 부족해 환경관리, 주민 건강증진, 복지여건 개 선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을 통해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산단의 경우 지방세는 국세의 1.25%인 750

억원이다.

전남도는 연말께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접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4월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일각에 서 특정지역 근로자 위주 지원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

도의 한 관계자는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 별법안 통과가 불확실해 별도의 특별법 발의를 추 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에는 현재 270개 업 체가 입주해있으며 이중 49.6%인 134개가 석유화 학업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요우커 잡아라"

이낙연 지사 방중 앞두고 화순 주자묘 등 잇단 방문

이낙연 전남지사가 19일 화순 주자묘와 해남 황조별묘 등 도내 중국 관련 유적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달 말 예정된 중국 방 문을 앞두고 양국 간 우호교류 증진과 관광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

이 지사가 찾은 화순 능주면 주자묘는 송 나라가 원나라에 패망하자 주자(朱子)의 증손자 주잠(珠簪)이 한림원 7학사를 데리 고 자리를 잡은 곳이다.

해남 산이면 황조별묘는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 구원군 수군도독으로 왔 던 진린 장군과 후손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 가 주석도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양국 간 상 호교류에 기여한 역사적인 인물로 화순의 주자, 해남의 진린, 광주의 정율성 등을 거 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매력 있는 전남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외지의 관광객들이 지속 적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특히 중국의 관광객 '요우커'들에게 는 의미있는 볼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그는 이어 "주자묘와 황조별묘 같은 전 남의 문화유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 주의 현대 문화시설, 전주 소리의 전당을 중국 관광객과 연계한다면 호남 상생의 국 제 연대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수도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달 말 중 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 치 마케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심철의 운영위원장 전국 운영위원장협 부회장에

광주시의회 심철의(새정 치·서구 1) 운영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에 선출됐다.

심 부회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국회와 중앙정

부가 입법권과 정책결정권, 재정권을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지방과 중 앙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는 가교역할에 최 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